

국회 'BBK 특검법' 통과...대선 이후 정국은?

법무부, 특검 수용·재수사 거부 배경

사상 초유 '당선자 소환' 가능성

국민의 뜻 수용하면서
檢사기 고려한 교육책

역대 어느 대선보다 후유증 심각 우려
취임 전까지 결론 못내면 '수면 아래로'

국회가 17일 'BBK 특검법'을 통과 시킴에 따라 오는 19일 대선 이후 정치·법률적으로 정국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수사 대상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지난 주말까지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선두를 달러왔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경우 대선이 끝나고도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역대 어느 대선보다도 심각한 선거 후유증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당선자 시절이나 취임 초기에 나약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명박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됐을 경우를 가정한 상태에서 특검법에 따른 향후 정국의 흐름을 전망해 본다.

문제는 신임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 25일 이전에 특검의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는 점. 이번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30일, 여기에 10일간의 연장 가능하다. 취임일 전에 수사를 마칠 수도, 넘길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신임 대통령 취임일 이전까지 특검이 수사 결론을 내놓지 못하면

이 후보는 그로부터 임기(5년) 내내 법적인 단죄를 받지 않는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월25일 이후에 특검이 "이명박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다"는 결론을 내놓더라도 기소를 할 수 없고 '이명박 대통령'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물론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위를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이는 '정치적 약속'일 뿐이다.

하지만, 특검이 2월24일 이전, 즉 이 후보가 당선자 신분일 때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는 2월24일 자정까지 당선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유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가능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때까지 재판이 끝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취임 전 당선무효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고 있지만 형사 소추의 진행 즉 형사재



대한통합민주당측이 제안한 'BBK 특검법'이 통과된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표결에 앞서 민주당동당 심상정(아래줄 오른쪽부터), 강기갑, 단병호 의원 의원과 신당 의원들이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을 막고 있지는 않다. 특히 특검법 1심 재판고는 기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각각 전심의 선고일로부터 4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기소를 당하더라도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 취임 6

개월이 되는 8월에는 대법원에 의해 당선무효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현재 이 후보에게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의혹은 도곡동 땅 및 (주)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과 BBK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 크게 2가지다.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서울시장 재직 시절 제출한 재

산보고가 허위자료에 해당, 공직자 윤리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된다. 또 BBK 주가조작(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횡령(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도 유죄로 판가름날 경우 대통령직 상설 기준을 넘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법무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BBK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하도록 지휘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특검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김·국장 등 간부들이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BBK 특검법이 국민의 이름으로 의결돼 송부된다면 비록 특검법 자체가 갖는 헌법정신과의 충돌, 실효성과 비용 등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성진 법무장관이 노 대통령의 'BBK 재수사 지휘권 발동 검토' 지시를 수용하지 않고 정치권이 도입하기로 한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은 검찰의 사기를 고려한 교육책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 입장에서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기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검찰 수사에 전폭적 신뢰를 보낸 마당에 "재수사하라"고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 장관이 16일 노 대통령의 지시가 있는 뒤 소집한 긴급 간부회의에서 수사 지휘권 발동과 특검을 모두 거부하자는 강경한 의견부터 지휘권 발동은 거부하되 특검은 수용하자는 절충안,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BBK를 설립했다고 밝힌 대학 강연 동영상 등 추가 증거가 나타난 만큼



대한통합민주당측이 제안한 'BBK 특검법'이 통과된 17일 국회 본회의장에 정성진 법무부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연합뉴스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신속히 결론을 내자는 방안 등이 두루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형식상 검찰총장이 직무명령으로 재기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검찰 사기를 저하하고 수사팀이 반발할 수 있는 데다 내용상 수사권 지휘 발동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일부 정치권과 국민의 믿음을 되돌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특검법 어떻게 처리됐나?

'BBK 특검법'이 17일 오후 국회 법사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전격 통과됐다.

예초 특검법 표결 과정에서 대한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간의 '대혈투'가 예상됐으나 이 후보가 전날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힌 데다 한나라당이 이날 수정안 제출을 포기하고 표결에 불참, 이날 본회의는 심검게 막을 내렸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국회를 폭력화 욕설이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전락시킨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20분. 입재정

'국회의장 직권상정' 20분만에 통과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이용희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37분께 특검법안을 공식 상정했다.

이어 신당 윤호중 의원의 원안 제안설명과 같은 당 김종철 의원의 수정안 제안설명에 이어 신당 문병호 의원 및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찬성발언이 이어졌고 곧바로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이 끝난 시간은 정확히 2시57분이었고, 재

석 16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특검법 표결에는 신당 이외에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국민중심당 의원 대부분과 창조한국당 김영춘 의원, 참주인연합 김선미 의원도 참석했다. 최근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 이회창 후보 캠프로 간 박성문 의원과 임종인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도 모습을 나타냈다.

신당과 한나라당은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

어 특검법 처리대책을 논의했다.

신당은 본회의장에서 비공개 의총을 열고 직권상정을 통한 특검법 처리 방침을 거듭 확인한 뒤 전의를 불태웠고, 한나라당은 국회 246호실에서 열린 의총에서 수정안 제출 후 표결, 본회의장서 부당성 설명후 퇴장, 본회의 원천 불참 방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이다 결국 불참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법안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사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입재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자 "부당한 절차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면서 본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靑 "법무부 특검 수용 대통령 지시 따른 것"

청와대는 17일 법무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BBK 재수사 검토' 지시에 대해 "특검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대통령 지시를 받아들여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 "어제 대통령께서는 법무장관에게 '검찰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국민의 의혹해소와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

동을 검토하되, 다만 국회에서 특검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가장 실효성있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는 이명박 후보가 시인하는 'BBK 동영상' 공개 이후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또 이 후보측이 BBK 특검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하고 대통령 지시를 받아들여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 KRA Plaza 365 Goodday! 광고. Includes a horse racing image and a table with event details.